

## 보도자료

보도일시 [지면보도] 2020년 12월 10일(목) 조간부터 가능  
[인터넷 기사] 2020년 12월 9일(수) 13:00이후 가능

[연구관련]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  
(044-287-6650, leeky@kli.re.kr)  
담 당 자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평가기획팀장  
(044-287-6407, shin@kli.re.kr)

김대호 한국노동연구원 홍보전략팀장  
(044-287-6022, jcahn@kli.re.kr)

배포일시 2020년 12월 8일(화) 17:00

## 지역 산업 및 고용위기 지원대책의 고용효과

### □ 연구목적

- 지역고용 및 산업위기에 대응한 정부 지원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 □ 연구 내용

-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의 지원정책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고용효과 추정
  - 지역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미시고용효과
- 해외 사례와 시사점
- 정책 제언

### □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원대책

-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위기 지정제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제도를 운영
  - 주요 지원대책을 보면 고용안정(근로 실직·퇴직자지원), 수요창출(수출, 시장, 공공조달), 혁신역량(연구개발)지원, 사업다각화(대체, 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지원), 지역경제(상권) 활성화, 금융·재정(유동성)지원, 기타(목적예비비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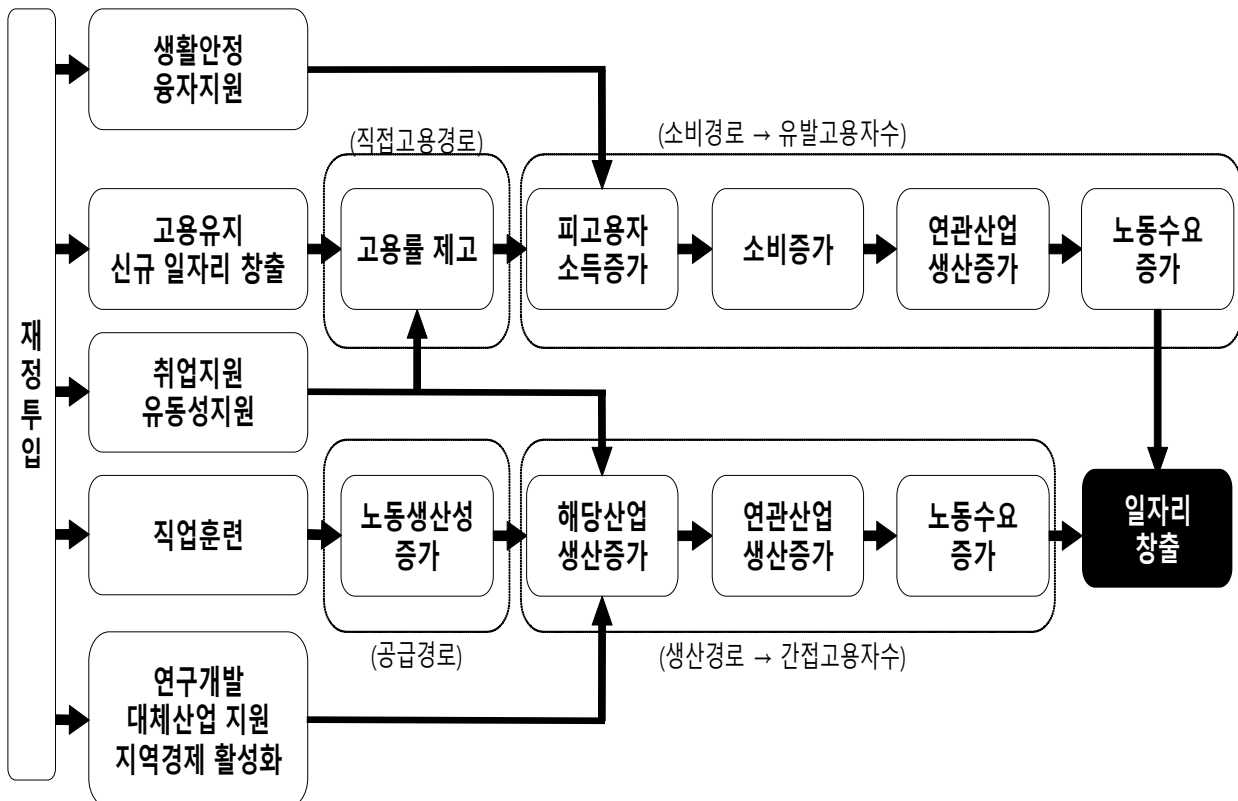
##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근거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지정자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정기준	- 해당 업종의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대량고용변동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위기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을 전국 평균과 비교 - 전년 또는 3년전 대비 고용위기지역의 일정 수준 피보험자수 감소, 일정 수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가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지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주된 산업 * 산업특화도, 지역 내 비중, 지역의 산업구조다양성 지수(DI)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종합적인 고려 * BSI,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감소 *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정지역		군산, 고성, 통영,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	군산,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목포·해남
대상업종	조선	자동차, 조선	자동차, 조선
지정기간	1년(연장 1년)	1년(연장 1년)	최대 2년(1회 연장 2년)
지원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고용위기 지정 지역에 있는 사업주, 노동자(퇴직자 포함), 구직자 등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실직자(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포함)
지정절차	①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 고용부 장관에게 신청 ② 업종 지정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고용지원조사단 운영 ③ 관계부처 협의 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①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 ③ 고용재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④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을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서 제출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③ 산업연구원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지역에 대한 실사 및 자료 수집 실시 ④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정함.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재직자 및 실업자 훈련지원 훈련연장급여(최대 2년 구직급여의 100%) 취업성공패키지 구직급여+특별연장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300만 원)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	좌동(위기산업만 해당) + 지역 전체로 확대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 지원+퇴직인력 재취업 인건비(최대 3천만 원, 1인당 1년) 희망근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100%) 신·기보 특별보증지원 강화 산업 R&D 및 인프라지원 지역인프라지원(도로, 환경 등)

## □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일자리 창출경로

- 재정투입을 통한 고용률 제고와 생산성 증대를 통한 직접고용, 소비 경로와 생산 경로를 통한 간접 및 유발 고용을 야기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일자리 창출 경로]



## □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고용효과

-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고용효과 추정
  - (양적 고용효과) 2019년 6월 말까지 투입된 총 1조 9,740억 원의 재정지출에 따른 유발된 고용효과는 전체 5만 2,783명이며 취업유발계수는 평균 10억 원당 26.7명으로 분석됨
  - 해당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에 대한 고용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지역 < 광역권 < 기타지역 순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로 보면 예산 10억 원당 고용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에 따른 산업별 고용효과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합성대조방법을 이용한 지역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미시고용효과
  - (사업체수의 변화)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기업의 소멸을 방지하고, 대체산업 육성이나 소상공인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을 유도하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 직후 1년 내외의 단기간에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피보험자수의 변화) 제조업은 유의하지 않은데 비해 비제조업 피보험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통영·고성을 제외한 4개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 : 군산 2.6%, 목포·영암 1.5%, 울산 1.8%, 거제 1.3%

## □ 해외사례와 시사점

- 국가마다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 운영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핀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에서는 지역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나라의 제도는 중앙부처 중심의 집중화된 관리구조를 갖고 있는데 비해 유럽에서는 지방분권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직접 주체가 되어 지역 내 구조조정을 주도
  - 둘째, 우리나라의 위기지역 지정제도는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이 다소 모호하여 역량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위기지역으로 선정 되더라도 광역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데 어려움
    - 이에 비해 유럽에서는 지자체 중에서도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
  - 셋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구(舊) 산업지역의 재생이라는 관점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고용위기정책 및 산업위기정책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상대적으로 부족
    - 지역재생의 관점이 약하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

## □ 정책 제언

- 사전 및 사후 대응시스템 구축
  - 지역산업 및 고용통계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
- 지역주도의 위기지역 대응 체계를 구축
  - 지자체의 독립성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 확대 필요
- 중앙정부간 지원협력체계의 구축
  - 고용부 중심의 고용위기지역과 산업부 중심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제도를 지역 주도하에 두 지원제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두 제도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 제도에 명시적으로 동시 지정 가능 및 동시적 지원 여부 심사 등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
- 지역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을 마련
  - 지역산업위기가 발생했을 때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관련 기업, 근로자, 연관 산업 기업의 신속한 구조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하여 시급성 및 여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
- 구조조정 전문기관의 육성 및 기업가적 발견(EDP)협의체 운영
  - 핀란드의 ELY 센터, 노르웨이의 이노베이션 노르웨이, 이탈리아의 투자진흥청(인비탈리아)과 같이 구조조정에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원해 주거나 실행하는 정부기관을 육성
  -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용 및 산업위기 극복 전략 및 정책과 지원방안의 기획·운영과 예산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첨부: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20년 제11호(통권 제19호).    끝.